



“투표 없이 시장 직선”... 공은 정부로

도, 금주 내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 제출
주민투표 없이 총리실 제주지원위 등 심의 받기로
정부 측 “법적 절차 개시 등에 협조”... 결과 관심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이 이번 주 중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에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를 방문해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에서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의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2018년 12월 6일), 도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안 가결(2019년 2월 27일), 도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2019년 4월 22일)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은 다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주민투표 실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도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개선에 총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도 힘을 보탬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제주지원위 등 정부 관계자들은 3일 제주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제주에서 제도개선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제주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해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주 금요일(7일)까지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면 지원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주민투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입법화할지 아니면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해 추진할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청년 창업을 응원합니다” 4일 제주 서귀포시 NH농협 남제주지역농협 건물에서 열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베이’(START BAY) 개소식에서 원희룡 도지사, 위성근 국회의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고용훈 농수축경제위원장, 양윤경 서귀포시장 등 참가자들이 파티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는 전국 시·군·구 최초의 스타트업 보육기관이다. 사진=제주도 제공

불붙는 ‘복지병원 소송전’... 공방 예고

복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관련 소송 본격
도, 최근 소장 송달 받아... 전담 법률팀 구성·가동

제주특별자치도와 복지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복지제주)의 외국의료기관 복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복지제주 측이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음에 따라 소송 대응에 본격 나서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앞서 중국 자본인 복지그룹의 자회사인 복지제주는 지난 2014년 11월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

병원 사업에 착수, 2017년 7월 복지병원 건물을 준공해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해줬으나 이에 반발한 복지제주는 올해 2월 14일 행정소송을 냈다.

복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인 90일을 넘기고도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정정문을 통해 4월 17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결국 복지그룹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주도는 “복지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제주도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논의, 법무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그룹은 지난달 17일 병원 근로자 50여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 14명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노동청 제2근로개선지도센터에 유급 휴직 급여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진기자

“5당 + 한국당 대표 일대일 회담하자” 靑 꺼낸 ‘국회 정상화 카드’ 통할까

수락시 오는 7일 회담 예정

청와대가 여야 5당 당 대표 회담과 자유한국당 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을 오는 7일 열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4일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에 여야 당 대표 회담과 국회 개원을 위해 각 당에 이같은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각 당을 찾아 이에 대해 논의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추경의 시급성, 대북 식량 지원의 현실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긴급성, 형

가리 유감선 침몰 사고에 대한 국민적 대응,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활력 대책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국회를 빨리 개원하기 위해 회동이 필요하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수석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측에서 요구하는 의제를 확대하는 문제와 형식, 일대일 회담 방식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수용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만큼 이제 5당 당대표 회담과 일대일 황교안 대표와의 단독 회담을 포함해서 즉각 실무 협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

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또 “참고로 대통령께서 9일 해외 순방을 떠나시니 회담 제안 날은 7일 오후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6일까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편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3당 원내교섭단체 회담과 일대일 회담을 주장하면서 청와대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일대일 회담 요구와 대통령께서 5당 당대표 회담을 아주 정말 절묘히 결합시킨 정무적 안”이라며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도, 폭염 피해 예방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때 이른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2019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도민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에 따르면 폭염은 지난해 7월

11일부터 36일간 이어졌다. 반면 올해는 폭염이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돼 약 49일 빨라졌다.

이에 제주도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목표로 폭염대비 기간을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대비 대책기간동안 관련

부서 합동 대응 TF팀을 가동해 선제적 대응과 상황관리에 나선 계획이다. 또 폭염 저감시설인 생생그늘터를 총 70곳으로 확대 설치·운영하고, 공공장소 얼음비치 등을 추진한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 480곳에서 올해 487곳으로 7곳 확대·지정하고 냉방비 등을 지원한다. 이소진기자

난치병 앓는 학생 학업 포기 막는다

도의원 공동발의 조례 통과
학습·건강권 보장방안 담아

가장 소외받는 학생 중 난치질환 학생들에게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15명의 도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22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전격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서 생명이 위중하거

나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감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도내 초·중·고 난치병 학생 약 320명 정도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향후 현재 일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방과후 활동비 수준인 약 300만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성준기자

2019 제주 킹 오브 더 마운틴 전국도로 자전거 대회

천혜의 관광지 제주도
“함덕해변, 월정리해변, 성산일출봉, 섭지코지를 사이클과 함께”

일시 : ① 경정부분 : 2019년 7월 6일(토) ▶ 10시 출발 [가시리 조랑말체험관앞 76KM]
② 그람폰도(비경정) : 2019년 7월 7일(일) ▶ 8시출발
[구좌체육관 -> 1CP(월정리 해변) -> 2CP(해녀박물관) -> 3CP(섭지코지)]

신청마감 : 2019년 6월 21일 17:00시 시간 엄수

접수방법 : 제주도 자전거연맹 홈페이지 (www.jejujucycle.co.kr) 공지사항으로 들어와서 접수신청 할것
담당자 연락처: 010-2644-4449 (경기부장 오병훈)
참가자 전원 증식 및 기념품 제공

※ 제주도자전거연맹 홈페이지 대회요강 참조 (www.jejujucycle.co.kr)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연맹

주관 대한자전거연맹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KCTV 제주방송